

이상돈의 '바른 소리'



정계개편을 논의할 시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지지함에 따라 정국은 혼미 상태에 빠졌고 여당과 야당은 공전을 둘러싼 내분을 잠시 멈췄다. 하지만 두 정당의 내분은 소강상태에 들어가 있을 뿐인데, 내부 사정으로 볼 것 같으면 야당의 사정이 여당의 그것에 비해 열 배는 심각하다. 실제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상태로 총선을 치를 수 없다고 보는 사람이 많으며, 의원들 간에도 무언가 큰 변화가 있지 않으면 야권이 꺾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이 새정치연합의 비주류 의원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안철수 전 대표는 사흘이 멀다고 문재인 대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박영선 전 원내대표는 야권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전당대회를 열 것을 제안했다. 두 사람 모두 문재인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안철수 의원은 문 대표의 완전한 퇴진을 요구하는 데 비해 박영선 의원은 문 대표가 전당대회를 통해 재선 임 받으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새정치연합 의원 79명이 오픈프라이머리를 통해 공천을 하자면서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혁신위원회가 내어 놓은 혁신안을 폐기하자고 주장하는 것이어서 문재인 대표가 어떻게 대응할지가 주목된다. 새정치연합이 처해 있는 심각한 상황은 두 갈래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새정치연합의 기반인 호남, 그중에서도 전남 광주에서 민심 이반이 심각하다는 점이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 간에 새정치연합의 현재와 같은 리더십으로는 호남 지역과 수도권 호남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가 어려워 보인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선 적극적 투표추진 호남 유권자들의 행배가 야당에게 중요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둘째는 새정치연합이 20~30대 유권자로부터 떨어져 있다고 있다는 점이다. 젊은 세대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지지하지 않지만 민생 문제에 무력한 야당에 대해서도 냉담하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대부분 의원들도 이런 문제를 알고는 있지만 총선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지 상황을 적극적으로 타개하려는 구체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김상곤 혁신위가 당의 쇄신을 위해 혁신

안을 내어 놓았지만 그것은 새정치연합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되지 못한다. 혁신안의 핵심인 현역의원 평가를 통한 20% 컷오프는 2012년에 새누리당이 실패해 보고 폐기해 버린 제도로는 점에서 제대로 시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박영선 의원이 주장하는 대로 통합전당대회를 열어서 리더십을 교체하고 새 인물을 영입해서 당의 면모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야권을 분열시키지 않고 당을 쇄신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하지만 이를 시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문 대표가 일단 물러나야 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사람이 많다.

야권을 아우르는 통합전당대회를 통해 리더십을 교체하지 못하면 결국은 호남과 수도권 비주류 의원들이 주축이 된 신당이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신당이 실패하면 진영논리를 탈피해서 민생을 살피는 개혁을 내걸고 이에 부응하는 새 인물을 등장시킨다면 의외의 성공을 거둘 수도 있을 것이다.

국정능력을 상실한 정부와 급격하게

우경화하고 있는 새누리당에 실망하고 있지만 현재의 새정치연합을 지지하지 못하는 유권자가 늘어 가고 있는 점도 신당에는 기회가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신당은 1990년 3당 합당을 통해 만들어진 지역 대립과 이념 대립의 정치구도를 혁파하는 정계개편의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신당 논의는 새정치연합이 시대적 여망을 담아 내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문제는 누가 신당 추진 세력을 통합해서 총선을 치를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에 관해서는 손학규 전 대표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거론되고 있다. 물론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전남 강진에서 집거 중인 손 전 대표가 정치 일선에 다시 나서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관문이 만만치 않다.

하지만 손 전 대표가 야당에 실망한 야권 성향 유권자와 여당에 실망한 여권 성향 유권자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적임자라는 데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이제 남은 시간은 불과 2개월뿐이니 새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정계개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중앙대 명예교수>

종교칼럼

나는 '국민학교'를 다녔다



김영철 남동5·18기념성당 주임신부

유이 적지 않으리라는 이유로 이름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1996년부터 식민지 잔재 청산의 일환으로 초등학교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국민학교의 '국민'의 의미는 '황국신민(皇國臣民)'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일제식민지와는 다르게 한국어와 한국역사도 배웠습니다. 그때 국사가 독립교과가 되고 각종 시험에서 필수 과목이 됐던 때였습니다. 국사는 국민윤리와 함께 국민에게 국가주의 정신자세를 심으려는 정신교육에 이용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국사교과서는 국정도서로 바뀌었습니다. 국사교육은 정부의 통치이념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통로로 이용되었고 국정 국사교과서의 내용은 이를 반영했습니다.

'나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국민교육헌장'의 시작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외워야만 했습니다. 국민학교 6학년 때까지 구구단도 다 외우지 못한 내가 국민교육헌장만은 달달 외웠습니다. 왜 그때는 몰랐을까. 나는 민족중흥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음을. 나는 그때 기뻐해야 국민학생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국민학교 과제 중에는 표어 만들기라든가 포스터 그리오기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했던가요.

'때려잡자 공산당, 무찌르자 오랑캐, 방공방첩, 수상하면 신고하자.'

북한 사람은 입가에 침을 흘리며 머리가 빨이 달린 먹잇감을 노리는 사나운 늑대의 모습으로 기괴하게 그려졌습니다. 난 정말 북한 사람은 짐승과 같은 모습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모습은 내 마음 속에 깊이 박혀있었습니다.

2005년 평양을 방문했었습니다. 못자리 비닐박막 지원을 했고 잘 사용되는지 보러갔습니다. 가슴이 뛰었고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손자 손을 잡고 울밀대 주위를 산책하고 있었는데 사탕을 주자 아이가 기쁘게 받았습다. 또 어떤 할아버지는 손녀와 함께 대동강에서 여러 사람들 틈에 끼여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우리가 똑같은 겁니다. 피가 돌고 감정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 깊이 박힌 왜

곡된 모습이 그제야 바뀌고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한다고 야단입니다. 1974년의 유신정권의 국정교과서의 되풀이입니다. 그때 국사는 국가주의 정신교육에 이용됐습니다. 국난극복사관을 내세우고 유교의 전통윤리를 국민의 정신자세로 강조했습니다. 검정으로 발행되던 국사 교과서는 국정도서로 바꿨습니다. 지배층 위주의 서술과 정부의 홍보 역할을 하거나 반공이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하나여야 하고 하나로 행동하며 아무 비판의식 없이 살아야만 된다는 전체주의와 획일화였습니다.

역사는 참다운 인간을 위한 거울이 돼야 합니다. 내가 받은 역사교육은 국가에 충성하고 사회에 모범이 되며 권력에 늘 복종하는 인간을 길러내는 교육이었습니다. 또한 권력자들의 권력유지 수단으로도 사용됐습니다. 이চ্ছে 그런 역사교육은 그만해야 합니다. 역사교육은 이념도 정치도 아닌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교육이 돼야 합니다. 다양성과 함께 창조적이고 비판적인 인간, 인간을 위한 사랑을 기르는 역사교육이어야 합니다.

기고

교도소 이전부지와 광주경제 발전



조오섭 광주시의원

전투를 벌였던 장소이며 5·18관련자들과 군부독재시절 민주주의를 외쳤던 수많은 인사들이 감옥살이를 했던 역사적 장소이다. 즉, 광주를 광주답게 만들어 광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이토록 중요한 곳이기엔 지역사회에서는 교도소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 이미 수차례에 걸쳐 지난한 논의를 거듭해 왔다. 그리고 이제 그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지금도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몇 가지 문제를 다시 짚어보고자 한다. 이전 부지 활용을 앞서 기본 전제 조건은 토지에 관한 부분이었다. 법무부 소유 부지를 무상으로 양여 받기 위해 광주시는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부지의 2/3는 무상양여가 거의 확정되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다. 교도소 1/3 부지에 법무부측에서 구치소를 전격적으로 미결수의 인권 문제 등으로 구치소(미결수 수용시설)와 교도소(기결수 수용시설)를 한 시설에 두는 예가 없다는 법무부의 입장 때문에 워낙 이 문제를 해결점을 찾기 어려웠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지역 정치권과 이 시점에서 법무부의 노력으로 구치소를 다른 곳에 건립하기로 논의가 거의 완결

되어가고 있다.

기나긴 논의의 과정에 합심으로 노력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하나의 장벽을 넘으니 이제 새로운 장벽이 나타나고 있다. 부지의 무상양여에 대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음에도 당초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지역사회에 팽배해진 것이다. 이전부지에는 총1462억(국, 시, 민자 포함)의 사업비로 한국 민주주의 전당, 세계인권미술관, 김대중재단 현대미술관, 민주인권평화센터, 인권교육훈련센터, 인권기념평화공원, 인권유스텔 등이 들어 설 예정이다.

한국민주주의 전당은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삼아 광주의 5·18을 넘어서 국내외 민주주의 발전과정의 주요 사건 및 인물 등 대한민국 현대사의 민주주의에 대한 기록·전시·교육·교류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김대중재단현대미술관은 김대중 전 대통령 리더십의 키워드인 국제관계, 대북관계, 분권행정, 인권 평화 등에 대한 교육과 연구를 하는 곳으로 계획되어 있다.

또한, 민주인권평화센터는 민주인권평화캠프의 컨트롤 타워로서 민주인권평화 관련 국내외 주요기관과 단체의 사무소와 법무부의 노력으로 구치소를 다른 곳에 건립하기로 논의가 거의 완결

다불어 주변을 주제 공원화하여 주요 시설들을 적절히 배치, 시민들의 여가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한 인권유스텔을 건립하여 광주를 찾는 수학여행단이나 관광객들이 편히 쉬 수 있는 공간도 계획되어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의 공약이었던 '민주화 관련 상징 시설물과 공원과 사업 추진하겠다. 광주교도소, 시가문화관, 무등산, 구도청(문화의 전당) 및 5·18 아카이브센터(구 킬리센터) 등을 5·18사적지와 연결하는 세계적인 인권, 관광벨트를 구축하겠다'(박근혜 대통령 지역 공약집 26쪽)는 약속을 지금 무참히 저버리려 하고 있다. 이전부지의 중심 시설인 한국민주주의 전당 예산을 집권기간 계속 단 한 푼도 계획, 집행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교도소 이전부지는 광주의 정체성을 확립시켜주는 중요한 사적지이다. 또한 문화의 전당과 망월 국립묘지, 광주호와 생태공원, 가사문화관과 무등산을 잇는 역사문화관광벨트의 중심축에 자리하고 있으며 유스호스텔 등으로 광주의 경제 발전에 독특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이제 이전이 마무리 되었으니 새로운 산을 넘기 위해 지역민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당시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기를 바란다.

社說

나주시, 뭘 바라고 규제완화에 역행하는가

나주시가 나주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단독주택 조성 사업 허가를 일도당도않은 이유로 미루고 있어 그 속내가 무엇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국토부는 혁신도시 택지사업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했지만 나주시는 임의적인 해석으로 사업 승인을 미루며 규제완화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는 올 1월 초 블록형 단독주택 사업의 축진을 위해 택지개발 지침 개정안을 발표·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 내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사업의 경우 도지 분할은 42평부터 가능하고 주택을 짓지 않아도 용지 매각을 할 수 있게 됐다. 일정 규모의 블록 안에 수십 세대의 단독주택을 건립해야만 분양이 가능했던 기존 방식은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탓에 사업자들의 의욕을 꺾어 놓기 일쑤였다. 실제로 LH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전국 31개 지구 286필지 중 70%가 매각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라비뉴가 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국토부의 규제완화에 따른 것이었다. 관련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혁신도시 내 합전 뒤면 4570평을 분할하면서 모서리 6개 필지를 다른 필지보다 소형인 60평 정도로 나눠 대지 조성 사업계획 승인을 요청한 것이다.

하지만 나주시는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유는 모서리 60평형 필지의 부지 모양이 인근 필지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사업자 측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도 아닌데 모양을 문제 삼아 허가를 미루고 있다니 어이가 없다.

현재 광주시와 전남도는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 조성을 앞당기기 위해 행정 자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대조적으로, 나주시는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주지는 못할망정 없는 규제까지 만들어서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행정이 개선되지 않는 한 혁신도시의 장미빛 미래는 요원할 뿐이다.

롯데쇼핑 월드컵점 불법 의혹 철저히 밝혀라

광주시가 롯데쇼핑(주) 광주 월드컵점의 불법 재임대 의혹에 대한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그동안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바주기가 아니었느냐는 시각도 있어 온 게 사실이다. 이번 감사에서 실상을 철저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다.

롯데는 지난 2007년부터 광주시와 월드컵 경기장 부지 내 5만7600여㎡와 건물 1만8108㎡를 연간 45억8000만 원의 임차료를 내고 20년간 사용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이곳에 대형 마트와 아웃렛 등을 운영하고 있는 롯데는 일부 매장을 허가받지 않고 재임대를 통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익을 올리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2년에는 46억5000만 원의 재임대 수익금을 올린 것으로 세무당국은 추산하고 있다. 사실상 다른 업자한테 받은 임대료만으로 시 대부분을 내고 도 남을 만큼 건물을 공짜로 사용하고 있었던 셈이다.

롯데의 재임대는 명백히 규정 위반점의 불법 재임대 의혹에 대한 감사에 이 대부분은 재산을 전대(轉貸)하거나 양도하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썼다고 한다. 하지만 재임대 면적은 계약서상 승인 기준(9289㎡)을 훨씬 초과한 1만3287㎡(2014년 기준)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2014년 기준으로 파악했다. 뒤늦게 광주시는 재임대 면적 초과 사용 수익금 4억 원을 요구했지만 롯데는 버티고 있다. '단순한 면적 변경은 계약 위반이 아니다'라는 항변이다.

광주시는 왜 애초부터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 시가 불법영업을 근절시킬 수 있는 강력한 제재를 미루는 바람에 문제를 키웠다는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감사에서는 불법에 대해 미지근하게 대처한 이유가 무엇인지 규명해야 한다. 혹여 묵인이나 방조가 있었다면 책임자를 엄벌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롯데의 계약 위반 사실이 드러난다면 상응한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

無等鼓

요즘 국내 쌀 소비량이 갈수록 줄고 있어 농민들이 울상이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국민은 1인당 하루 178.2g의 쌀을 소비했다. 1년 전인 2013년에 비해서는 5.8g이 감소한 쌀을 먹고 전두를 해 온 것이다. 평균적으로 보면, 당시 조선에서는 성인 남자의 한 끼 식사가 쌀 7첩이었으니 조선군은 왜군에 비해 끼니마다 무려 3.5배의 쌀을 더 먹은 셈이다.

본 배에 따르면, 왜군들은 한 끼에 두 흡을 채 먹지 않았다. 당시의 한 흡은 요즘과는 달리 60cc 정도였으니, 1cc 부피의 쌀 무게를 1g으로 단순 계산하면 왜군들은 하루 6흡, 360g도 안 되는 쌀을 먹고 전두를 해 온 것이다. 평균적으로 보면, 당시 조선에서는 성인 남자의 한 끼 식사가 쌀 7첩이었으니 조선군은 왜군에 비해 끼니마다 무려 3.5배의 쌀을 더 먹은 셈이다.

대식국(大食國)

하지만 우리 국민이 원래부터 이렇게 쌀을 적게 먹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이 우리나라를 '대식국'이라고 혀를 내둘렀을 정도로

사자 국가들은 조선 을 '대식국'이라고 불렀다. 다른 나라에서 하루 먹은 양식을 한 끼에 다 까먹은 셈이니 그런 말을 듣더라도 서운해 할 일은 아니었다. 게다가 당시엔 그렇게 먹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했다. 실학자 홍대용은 중국에 다녀온 뒤 "그쪽 밥그릇은 꼭 찻잔만 하더라"라고도 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이 원래부터 이렇게 쌀을 적게 먹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이 우리나라를 '대식국'이라고 혀를 내둘렀을 정도로 쌀을 많이 소비했다.

임진왜란 당시 왜군에 밀려 의주로 도피한 선조는 '왜군의 하루 식사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왜군이 하루에 쌀을 얼마나 먹는지, 그리고 군량미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알면 한양을 점령한 그들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급파된 조선의 첩자들이 전해 온 소식은 놀랄 만한 것이었다. 살펴

임진왜란 이후 420여 년이 지났으니 한국인의 식생활이 '상전벽해'로 변했다 해도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다만 쌀 한 알이 울고 웃던 우리 고유의 전통 문화가 점차 사라져 가는 것 같아 아쉬울 따름이다.

/홍행기 정치부장 redplane@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 광고문의 062-227-960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F A 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편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체육 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